

김창원 의원(보건복지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

< 서면 질문 >

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등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잘 살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.

- 1) 주민참여가 활발한 곳에 활동비 또는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활성화 도모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선도적 시범사업 해당구 주민단체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마련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역의 생활 단위인 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공적영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지원 사업, 마을계획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시행 중임

○ 주민참여지원 사업

- 복지, 문화, 환경,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의 활동 지원(2017년 기준 1개 모임당 1백만원 이내)
-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·단체 대상으로 공모

○ 마을계획

- 주민모임(마을계획단)에서 지역의제를 발굴한 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총회에서 토론·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
- 마을계획단 구성 → 마을계획 수립·실행 → 평가까지 전 과정(2년 소요)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(2017년 기준 동별 50,700천원 - 교육진행, 워크숍 및 주민모임, 마을총회 개최, 실행비, 지원인력 운영비 등)

※ 2017년 기준 마을계획 시행 55개동, 주민참여지원 사업 287개동(마을계획 시행동을 제외한 찾·동 시행동 전체)

○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

-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·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4개 자치구 26개동에서 추진 중이며,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-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(구별 2명) 운영비 및 사업비 : 자치구별 147백만원
- 동 자치지원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: 동별 53백만원

- 아울러 「찾아가는 동주민센터」 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민·관 협력에 기반하여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발굴·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치구, 공무원, 주민 등에게 포상을 시행하고 있음
-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자치회관(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심의·운영 및 수강료 징수)에 대해 주민참여도,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거해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차등 지원

< 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개요 >

- ▶ 평가기간 : 2017. 8 ~ 9월
- ▶ 평가방법 : 전문가(6명)에 의한 서면평가(70%) 및 현장평가(30%)
- ▶ 보조금 지원 : 1,332백만원(기본지원액 732백만원, 평가지원액 600백만원)
 - 평가지원액 : 최우수구(1) 50백만원, 우수구(14) 25백만원, 장려구(10) 20백만원

-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·주민 대상으로 해외 선진도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, 찾·동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매년 실시
 - 자치회관 담당 공무원 등 해외도시 연수 : 20명 내외
 - 자치회관 유공자 표창 : 100명(공무원 50명, 주민 50명)
 - 찾·동 유공자 표창 : 84명(공무원 42명, 주민 42명)
- ※ 2017년 기준 인원이며 자치구 추천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. 끝.

작	기관명 (부서명)	직 위	성 명
성	자치행정과	담당팀장	김 현 미 배 종 은
	☎2133-5834 ☎2133-5814	주무관	김 성 훈 나 흥 주
자	작성일 : 2017. 11. .		